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계란가격 발표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생산과잉 문제 해결이 1차적인 열쇠

계란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싼 제품으로만 알고 구매를 하던 계란이 언제부터인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농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생산비 선 이하의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다.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계란가격은 1979년 1월 11일 당시 채란분과위원회 및 계우회연합회 개최시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확, 신속한 난가 정보를 위해 시세엽서(양계속보 전신)를 발행키로 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컴퓨터 보급이 없던 시절에는 농가들에게 난가를 알려주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DC(계란가격 할인)라는 개념도 미미했다.

하지만 시세가 발표되기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현재 난가는 발표가격에서 개당 40원 이상의 DC가 형성되고 있으며, 후장기, 적용날짜 조정 등 많은 병폐를 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초에는 1~2원의 DC가 벌어지는 것도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DC가격이 10원, 20원, 30원 이상 벌어지면서 1~2차례 가격 DC를 줄이기 위해 현실화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끝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난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왜 농가들이 제값을 못 받는 거!”라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계란 금값’ 등을 운운하며 가격이 높은 것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최근 채란인들을 대상으로 협회에서 조사중인 설문에 따르면 DC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란계 사육수수증가와 유통상인의 횡포, 공정한 가격결정구조 부재를 차례로 꼽았으며, 해결방법으로는 수급조절 실시와 농가수취 가격 발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적당한 DC가격에 대해서는 10~20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대부분 의견을 주었으며, 상인들에 대한 횡포도 ‘악덕상인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계란발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회차원에서는 전국 난가를 일원화하고 DC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 채란분과위원회

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어 조만간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산감축이 필요한 만큼 부화장, 생산자들이 쿼터제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조직 개편, 개혁 등이 대안인가!

국내 축산업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FTA에다 사료값 폭등, 경제 불황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양계업계는 산물가격 하락, SI 공포 등 견잡을 수 없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로부터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축산정책단 기능축소 및 농업에 대한 지원축소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축산정책단 기능축소는 이미 농식품부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축산정책단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4월 개편이 발표되는 대로 인사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축산정책단이 축산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자원순환팀과 축산물위생팀이 없어지면서 결국 3개과(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동물방역과)만 남게 된다.

국(局)단위로 소비안전국과 녹색성장전략국이 신설되고, 과(科)단위로는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식품위생, 수출입검사, 4대강새만금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축산정책단의 자원순환팀이 없어지고, 축산물위생팀은 이력추적업무만 제외하고 신설된 식품위생과로 업무가 이양된다. 또한 지난달 대통령이 뉴질랜드 순방중 농업 개혁을 화두로 던지면서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혁을 표명한 바 있으며, 연초에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뜰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업계를 무겁게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고,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조직을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새정부 출범이후 축산국 폐지가 도마위에 올랐었고, 밀어붙이기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축발기금 존폐문제 논란 등 축산업계를 뒤흔드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축산정책단의 폐지를 전제로 한 일련의 수순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야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없이 농업 강국으로 발전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시장 개방에 대비해 왔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33.1%를 차지할 만큼 높아지고 있어 축산정책의 기능강화 및 정부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정책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조직개편, 개혁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축산자조금법 개정 작업 자조금사업단 법인화 추진 반발

자조금관리위원회 법인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를 비롯한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자조금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조금사업 수립 및 집행을 3개 단체(농협, 협회, 자조금사무국)에서 운영하면서 통일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의무자조금 수납기관(도축장 등)에서 축산단체에 의무거출금 지급시 수납수수료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축산자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말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 지자체, 자조금연구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총 10개 기관 및 단체에서 개선안을 제출받은 결과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조금관리위원회 법인화 및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자조금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을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관리위원장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법'을 제시하면서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로부터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일부 생산자 단체는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해 갈 경우 임의자조금으로 전환,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관리위원 구성, 대위원 임기 제한, 자조금 운용비 한도 등 논란이 되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발 후퇴했지만 관리위원회 법인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단 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통합하여 자조금사업단을 법인화한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관리위원회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자조금사무국만 법인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자조금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기능 및 자조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산란계와 육계 자조금은 계란과 닭고기 자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조금사업단에 대한 법인화 방침이 추진되면서 생산자단체로부터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계**